다산포럼

노란봉투법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2014년 '시사IN' 신년호에 한 독자가 보내온 4만7000원에 대한 사연이 실렸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한 독자가 10만명의 시민이 보태면 그 돈 갚아줄 수 있지 않겠냐며 보내온 것이었다. 노동자에게 전달된 해고통지서도 노란 봉투에 담겨 있었지만 한달치 희망을 담던 예전 월급봉투도 노란색이었으니, 노란색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하는 상징으로 삼자는 취지에서 노란 봉투를 사용했다고 한다. 수만 명의 시민이 동참한 노란봉투의 기적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물론 시민들의 십시일반은 큰 응원이 되었으리라 믿지만, 안타깝게도 그 힘으로도 버틸 수 없는 무간도의 중력이 해고 노동자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파업에 대한 과잉 폭력 진압을 겪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려 일상을 유지할 수도 없었을 노동자들이, 국가와 회사와 보험사들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가압류에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렸던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업도 어려웠지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손해배상 가압류 집행액을 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없다. 생계가 불가능했다. 이 고통 속에 해고 노동자가 삶을 버리고 그 고통과 원망을 함께하던 배우자가 아파트 베란다 밖 허공으로 걸어나가기도 했다. 알려진 사람만 33명이다.

2003년 한진중공업노조 지회장 김주익은 합의된 임금단체협상안을 파기한 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었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로 조합원들을 협박하며 노조 간부들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였다. 김주익의 통장에는 165만 원 월급에서 가압류 집행액을 빼고 13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는 타워크레인에서 내려가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바퀴달린 신발을 사주겠노라고 세 아이에게 약속했지만 그 돈으로는 신발 한 켤레 사기에도 빠듯했다. 129일째 되는 날 그는 거기서 목숨을 끊었다. 그의 동료 곽재규도, 최강서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도 손해배상에 목숨을 잃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살인도구이다. 그걸 잘 알게 된 기업은 이 비열한 도구를 한번 써본 뒤에 손에서 놓지 않는다. 폭력 진압과 해고와 구속에 이어 또 하나의 도구를 조자룡 헌 칼 쓰듯 돌려쓰고 싶을 것이다. 노동조합에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백년을 갚아도 못 갚을 빚을 갑자기 지게 된 노동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부진정연대책임이라 하여 동료가 포기하면 그만큼 더 갚아야 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연쇄적으로 삶의 의지가 바닥나는 것이 보인다.

노란봉투의 기적이 한달치의 희망에서 삶의 희망으로 부풀어오르는 방법이 있어야 했다. 손해배상 청구가 남발되는 우리나라의 야만적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시민들이 나섰다. 불법 파견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과 더불어 손해배상 제한이 이번에 노란봉투법으로 무르익게 된 사연이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손해배상 청구를 마주하게 되리라.

정부는 이 개정안이 사업주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우기고 있다. 헌법은 노동 3권이라 불리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그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에 재산권은 그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하고 그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노동 3권의 실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불평은, 제한적 권리를 위해 보편적 권리를 무시하고 공공복리를 포기하는 반헌법적 발상에서나 나올 소리인 것이다.

재산권이라는 민법적 가치가 노동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도록 해석되는 우리나라의 법률은 세계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다. 프랑스는 불법행위와 손해의 관계를 엄밀히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노조의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일하면 월급 25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파업 며칠에 수억 원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실직고하라.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실 때문이 아니지 않은가. 수십 수백억 원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된 노동자가 크레인을 올려다볼 때 회사는 슬쩍 다가오지 않던가, 어용 노조로 옮겨오면 손배 명단에서 제외시켜주겠다고.

NGO 칼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조건 없이 폐기해야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일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된 주민발의 조례로 광주시의회가 수리·발의하여 소관위원회 심사에 이르게 되었다. 청구인은 교권 침해, 학력 저하, 성 정체성 혼란 등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비약이 심하거나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2012년 487건이던 교권침해가 2013년 253건, 2014년 243건, 2015년 136건, 2016년 92건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163건으로 다소 늘었지만 그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청구인은 '학생인권 제정은 곧 교권침해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조례 폐지안을 청구하였는데 위 통계가 보여주듯이 인과관계는 물론 상관관계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학력 저하 주장 또한 객관성이 떨어진다. 학교 성적표를 발급하면서 석차를 함께 표기하거나 학생들의 성적, 상급학교 실적을 공개하는 행위를 교육부가 일체 금지시키는 등 학력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법부 최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받지 않을 권리(학생인권조례)는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 혼란은 논쟁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다.

그런데 광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끄럽게도 조례 폐지안을 적극 수리했다. '청구인 명부가 이상이 없다'는 강변만 늘어놓을 뿐 법령위반 여부 등 청구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는 없었으며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시민사회 면담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굳게 약속했는데 전반기 의회가 마무리되기 직전 기습적으로 조례 폐지안을 발의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선거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거나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타 시·도 의원들과 명백히 대비된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그런데 다수당 소속 상임위원장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해 겨우 선출된 것도 모자라 제비뽑기로 교육문화상임위원을 배정해 교육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정) 여부 등 시민사회의 질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하면서도 설문조사, 공청회, 의견수렴 등 절차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향후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물론 민주, 인권을 중시하는 광주에서 조례 폐지안의 통과가 쉽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이 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시도할 여지도 없지 않기에 한 치의 의구심이 없도록 조례 폐지안에 대한 폐기 입장은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당론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 파행에서 보여주듯이 조례 폐지안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채 표결할 경우 또 다시 자중지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 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의회는 부당한 외압과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여 '인권도시 광주'임을 천명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 고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

"…자식을 어떡하든지 서울에서 길러야 되겠다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릴 엄마의 숨은 신앙이었다. 엄마는 우리가 도회지에서만 살았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세상을 뜨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우리시대의 큰 이야기꾼이었던 박완서 작가는 자전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20호가 채 안 되는 벽촌 개성 박적골에서 태어나 교육열이 강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일찍이 서울로 왔지만 기실은 이주의 원인이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노라고 고백한다.

형제 중 가장 체격이 좋고 잔병 한번 치른 일 없이 건강체였던 작가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복통으로 데굴데굴 구르는 것이었다. 벽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할아버지가 당신의 약방문에 의한 생약 한약 등으로 다스리거나 할머니가 무당집에서 굿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는 마침내 사경을 헤맨다.

작가의 어머니는 단호히 아버지를 달구지로 송도까지 싣고 갔으나 아버지의 맹장염은 복막염을 일으켰고, 배 속 가득 고름이 찬 것을 뒤늦게 알고 수술을 했지만 항생제도 없을 때라 결국은 덧나서 죽음에 이르고 만다…. 꽤 오랜 전 읽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있는 도회지에서만 살았어도 사랑하는 가족과 일찍 이별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탄식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1930년대의 상황이지만 현재 전남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전혀 낯설지 않을 것 같다. 가까이에 병원이 없어서 위중한 상태에 응급처치를 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죽하면 최근엔 나이 들면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 지를 결정하는 현실적 기준 중 '갑자기 아플 때 바로 갈 수 있는 대학병원이나 조금 큰 종합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을까.

최근 눈부시게 발달한 의학의 힘은 전례 없는 수준의 노화지연과 수명연장이라는 큰 축복을 가져왔지만 그에 비례해 의료혜택 또한 더욱 절실해졌다. 그 덕분에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전남은 가장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떠올랐지만 그에 반해 응급 필수의료는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 없는 전남의 상황이어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올해를 지역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삼고 있는 전남도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극도의 경쟁사회에서 벗어나 귀농귀촌하려는 정서가 늘어나는 추세라지만 전남의 열악한 의료 환경 앞에서는 오던 발길도 돌아서고 더 나이 들기 전에 큰 병원 가까운 도시행을 결심하는 것 같다.

SRT, KTX 상행선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만석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수도권 유명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인데 매년 70만 명이 대도시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유출되는 돈만 무려 1조5000억 원에 이른다.

높은 연봉 제시에도 공공의료원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산부인과, 소아과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라 아무리 산자수명한 전남이라지만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이 땅에 정주하면서 안심하고 아기 낳아 기르라고 권유할 수 있겠는가.

이런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남도는 도민의 30년 절박한 염원으로 지역사회·대학·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의대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마침내 국립의대 설립이 목전에 다가왔다.

하지만 의대설립이 가시화되자 지역이 동부와 서부로 나뉘어 대립하는 형국으로 바뀌고 있어 몹시 안타깝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도 가야할 길이 멀진대,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 간 갈등으로 자칫 천재일우의 기회에 작은 흠집이라도 날까 두렵고 우려가 크다.

생명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땅에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살펴 줄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이지만 많은 사람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한다.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희망하고 꿈을 꿀 때 의과대학의 염원을 이루는 기적이 전남의 건강한 미래와 마주할 수 있으리라.

社 說

민주당 '호남 경선' 흥행 대신 과제만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경선을 벌였지만 투표율 저조로 흥행에서 실패했다. 같은 날 치러진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는 원내와 원외 후보간 진흙탕 싸움 속에 원내인 현역 국회의원이 당선됐지만 갈등 봉합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한마디로 이번 민주당 호남 경선은 흥행에선 실패하고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만 남긴 대회로 종결됐다.

무엇보다도 지난 3~4일 치러진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이 광주 25.29%, 전남 23.17%, 전북 20.28%로 2년 전 전당대회보다 많게는 15%포인트나 낮아진 점이 아픈 대목이다. 역대급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처럼 1인 독주체제로 인한 관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최고위원 경선도 친명 주자간 대결로 김이 빠지면서 권리당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호남 대전'의 흥행 실패는 '구대명'(90% 득표율의 이재명) 기조를 이어오던 이재명 후보의 누적 득표율을 80%대로 떨어뜨렸다. 이는 낮은 투표율과 함께 민주당에 보내는 당원들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전 협의를 통해 최고위원 호남 주자를 정했던 이전과 달리 예선부터 세 명의 후보가 난립한 것은 호남정치 복원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염원과도 거리가 먼 것이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광주시당 경선은 더 많은 과제를 남겼다. 원내와 원외 후보간 '친명 경쟁' 속에 과열을 넘어 진흙탕 싸움을 벌인 탓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흠집 내기와 고발전이 잇따랐고 기초의원들의 줄서기 구태가 재현돼 2년후 지방선거 공천이 과연 공정하게 이뤄질지 벌써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선거를 거치면서 두쪽 난 갈등을 봉합해 '원팀 복원'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그러려면 '사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지금부터 공정한 지구당 관리에 나서야 한다.

폭염 극복·생태 회복, 도시숲에서 해법 찾아야

살인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도시숲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추진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공모에 광주호 호수생태원과 푸른길공원이 최종 선정됐다. 시가 조성한 도시숲이 접근성, 생태건강성, 경관적 가치를 두루 인정받은 결과다.

광주 도시숲은 찜통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피서와 힐링의 공간이 되고 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다양한 꽃과 나무를 볼 수 있어 자연학습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책로가 조성돼 연간 30만 명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했다.

폐선 부지를 활용한 푸른길공원은 동·남·북구에 걸쳐 조성된 명소로, 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사랑받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까지 6년 동안 계림동 푸른길시작마을에서 '푸른온리마켓' 축제를 열어 문화 관광자원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마을 주민 등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는 '같이ON마켓', '푸른RE콘서트·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고 있다.

광주는 고층 아파트 밀집으로 바람길이 막혀 폭염을 가중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광주시가 현재 도시바람길숲 등 25곳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이유다. 도시숲은 여름철 도심보다 기온을 3~7℃ 낮춰 열섬 완화 효과가 있는 만큼 도시숲과 녹지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폭염 등 이상고온과 미세먼지가 일상이 된 도심에서 '허파'나 다름없는 도시숲의 확충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안이다.

광주시와 자치단체는 나무심기와 옥상정원 가꾸기 등을 통해 도심 온도를 크게 낮춰 폭염도시라는 오명을 벗은 대구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광주시와 자치단체는 기후위기에 대비한 환경자원으로서 도시숲을 조성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자산으로 물려줄 필요가 있다.

無等鼓

금빛 총·칼·활

"긴장하면 주변 소리가 더 잘 들린다. 나를 위해서 동료들이 저렇게 열심히 응원해주는구나 싶어서 힘이 났다. 그래서 더 열심히 쐈다."(사격 양지인)

"개인전 때와 비슷하게 '넌 최고야'라는 말이 (단체전에서도) 내게 가장 꽂혔다. 그게 내게 가장 힘을 많이 줬다."(펜싱 오상욱)

"'고트'(GOAT·Greatest Of All Time, 역대 최고 선수)라는 단어를 얻었다. 이제는 (내가 봐도) 조금은 GOAT라 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양궁 김우진)

한국의 총·칼·활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단연 빛나고 있다. 신문·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금메달리스트들의 인터뷰 또한 젊은 세대의 감성과 패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중 자신만의 실력을 강조하지 않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리는 대목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총·칼·활은 '잘나'의 스포츠이다. 선수들은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시키고, 상대보다 한발 앞서 공격득점을 얻기 위해 4년 동안 기량을 연마하며 구슬땀을 흘렸을 것이다. 얼마나 단련을 했으면 어떤 여건에서도 한국 양궁 선수들의 심박수가 평정심을 유지할까.

양궁 애호가인 파울로 코엘료는 '흐르는 강물처럼'(문학동네)에 실린 '활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서 이렇게 말한다. "활쏘기의 동작은 머릿속의 생각을 몸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그때는 사소한 몸짓 하나가 우리를 배반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작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그리며, 기술을 직관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갈고 닦아야 한다."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반복되는 요즘, 파리 올림픽에서 청량감(淸凉感)을 맛본다. 시합 과정과 시상식 또한 100년 전 파리에서 비롯된 올림픽 정신을 생각하게 한다. 선수들은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 경쟁을 하면서도 페어 플레이를 펼치고, 비록 졌더라도 승자를 축하하며, 금·은·동 메달리스트들이 시상대에서 머리를 맞대고 셀카를 찍는다. 막말과 혐오로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한국 정치권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파리 올림픽에서 쏘아올린 '금빛' 총·칼·활 메달은 더욱 값지고 빛난다.

/송기동 예향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